



문서번호 : 25-11-민생위-0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전송일자 : 2025. 11. 17.(월)

전송매수 : 총 5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일시 장소 : 11. 17. (월) 10: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오늘(11/17)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졌지만 한미 무역통상 협상이 마무리되고 팩트시트까지 공개된 만큼, 더 이상 플랫폼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최근(11/14)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며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상 협상 결과를 빌미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합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초 중소기업·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플랫폼 거래공정화법)입니다.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여 신속하게 이들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특정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포기하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만 추진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이는 “구글, 쿠팡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민생입법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4. 이어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초심야배송’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쿠팡은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고 소비자와 노동자 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실질적 개선 없이 새벽배송 ‘찬반’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지난 8월 출범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 합의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합치면 주문 건당 40%가 넘어가는데 이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3천만 국민 전체의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바꾸고 노출을 조정하고 시장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불법적 구조를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끝.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불임2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미국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5.11.17(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공동주최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발언1. 한미 무역통상 협상으로 자영업자 외면하는 대통령실 규탄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
 - 발언2. 쿠팡 시장 독점, 노동자 착취 문제 해결 촉구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3. 배달앱 불공정행위, 과도한 수수료 규제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발언4. 온라인 플랫폼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내용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이연주 간사 02-723-5303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9월 1일, 우리 중소기업·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대 독점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 상인들이 쿠팡, 배민과 같은 플랫폼 기업 갑질에 스러져감을 알리기 위해 이 거리에 누워 간곡히 호소했다. 이는 민생단체의 뜬금없는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우리 민생은 지금껏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법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 보고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로 경제주권을 침해할 때 우리 민생단체는 미국 행정부에 내정간섭 말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민생의 편에 서야 할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축소하여 독점 기업의 사전지정을 포기하고,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 높여 경제주권을 외친 결과란 말인가.

심지어 국회와 공정위는 ‘갑을관계 공정화법’으로 플랫폼 갑질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언제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독점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민생 법안이 왜 이토록 허공에 떠있어야 하는가. 민생경제 분야 타운홀 미팅도, 민생단체와의 면담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AI 기술 육성에 몰두하겠다는 말뿐인 대통령 담화에 민생단체들을 다시 한번 좌절케한다.

국회와 공정위가 추진하는 ‘갑을관계 공정화법’에는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구글, 배민, 쿠팡 등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지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약의 의무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그것이다. 미국은 독과점 플랫폼의 사전지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미국 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독점기업이기 때문이지 미국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기업, 심지어 배민은 독일기업이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구글이나 메타 등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면서 유독 한국에서는 이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소비자들을 수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 플랫폼 수수료상한제도 앱마켓이나 이커머스 분야에까지 도입하되, 일괄도입이 어렵다면 일단

배달앱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든가 하는 단계별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생단체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는 민생 입법 외면 말고 직접 대통령이 약속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을 제정하여 추진하라.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된 플랫폼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25. 11.17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